

홍콩 민주화 시위와 일국양제의 전망에 대한 연구

박 광 득
대구대학교

•요 약•

9월 말부터 시작된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중국의 통일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일국양제의 성공 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하나의 실험대라는 측면에서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 민주화 시위는 2017년부터 홍콩행정장관을 간선제에서 주민의 직선제로 전환한다는 발표에 반대함으로서 시발되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서구식 민주주의의 이념을 도입한 직선제가 아니라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 속에서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선제는 홍콩주민이 원하는 행정장관 선출이 불가능하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시위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홍콩 민주화 시위가 선거방법에 대한 반대라는 정치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홍콩반환 후 17년간 누적되어 온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모든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되었다는 시각이 정확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양제의 진정한 의미와 함축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이면에 감추어진 문제점과 허점을 분석하는 것이 홍콩 민주화 시위의 진정한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해 당사자인 영국의 반응과 태도 및 중국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마지막 실지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은 향후 일국양제에 의한 통합의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반응과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며, 중국의 일국양제에 대한 허와 실을 분석함과 동시에 홍콩 민주화 시위의 미래와 전망은 본 논문의 연구 동기 및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홍콩, 홍콩특구, 일국양제, 민주화, 홍콩행정장관

I. 서론

금년 9월 28일부터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시위는 중국 중앙정부로서는 당혹감을 금치 못하는 사건으로 적절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반면, 미국을 비롯

*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하여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한 서방세계는 중국의 부당함을 지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입지를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관건이라는 측면에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홍콩의 시위가 조속한 시일 내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는 반면 중국위협론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중국을 간섭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잡겠다는 기세로 중국의 태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熊玠, 2014) 홍콩은 분명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일부분으로 중국공산당의 통치하에 있는 지역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화를 요구하고 연일 시위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아이러니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국제조약에 의해 영국으로부터 반환을 받으면서 체결한 중영합영조약의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홍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영국간의 주권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실지라고 할 수 있는 대만과의 통일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사실에서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성공적으로 반환 받은 이후 1999년 마카오를 반환 받은 중국으로서 홍콩과 마카오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따라 대만의 주권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많은 양보와 배려를 가지고 홍콩을 통치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부분들은 양보를 할 수 있으나 정치적인 측면을 양보할 경우 중국의 정체성과 주권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통제를 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張麟徵, 2014) 다시 말해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고 있지만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한 선거 방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홍콩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선거라기보다는 중국 중앙정부의 조정에 의한 선거였다는 점에서 과거 영국식 민주주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홍콩주민으로서 홍콩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왔다. 따라서 홍콩 반환 이후 홍콩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시정과 개혁을 요구하였으나, 중국 중앙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홍콩 주민들의 시위는 점차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高旭晨, 2014/9/28)

중국과 영국은 홍콩 반환문제에 대해 수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덩샤오핑이 주장하는 일국양제라는 방식에 합의함으로써 홍콩 반환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홍콩의 각종 문제는 일국양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해를 하여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과 일국양제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과 동기라고 할 수 있으며, 홍콩문제를 바탕으로 일국양제의 미래와 전망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의 시위는 중국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¹⁾

II. 홍콩 시위의 배경

본 장에서는 홍콩 민주화 시위의 발단과 배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홍콩문제를 이해하는 하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홍콩 민주화 시위의 배경은 정치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도 같이 병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측면

홍콩 민주화 시위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중국과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홍콩의 공식적인 명칭이며, 일국양제와 향인치항(港人治港)²⁾에 의해 외교와 국방이외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받는 것으로 영국과 합의하여 중국에 반환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민주적인 방식이 결여된 선거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홍콩 반환 직후부터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홍콩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는 홍콩 특구의 대표인 행정장관(Chief Executive) 선거를 보면 약 700만의 홍콩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간선제로 치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홍콩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姜新立, 2014) 다시 말해서 800명의 선거인단의 1인 1표 방식으로 기명하여 선출하는데 1997년 당시 1차 선거인단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임명하였고, 2차 선거인단은 기능별로 유권자가 선출하였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1차 선거인단은 중국 중앙정부에서 임명함으로써 친중국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거인단으로 구성되어 선출하였다는 것은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와 조정이 가능한 인물을 선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³⁾ 또

- 1) 본 주제는 현재 진행중인 사안으로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정치적 상황 논리에 따라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어갈 가변성이 존재한다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으며, 매우 시사적인 주제라는 점을 감안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 논문이 부재하다는 자료의 한계성이 있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자료도 시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되었다는 측면을 부연하고자 한다.
- 2) 홍콩주민들에 의한 홍콩의 통치하는 의미로 홍콩 주민들은 의사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대표를 선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퇴색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3) 2007년 후의 구성 및 선거 방법, 기본법에서 덧붙인 문건에 의해서 순서를 지정하고 수정하였다. 행정장관은 매번 5년을 임기로 하고 1회 더 연임할 수 있으나, 전 행정 장관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임명자는 남은 임기를 다음 임기의 5년에 더한다.

한 처음부터 친중국 성향의 선거인단의 영향력은 2차 선거인단 선거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다는 점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홍콩 주민들의 반발은 시작부터 예견되어진 사안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홍콩주권 반환이후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1997년 주권이 반환된 이후 홍콩 행정수반과 입법회 의원 선출을 직선제로 실시하기 위한 정치제도 개혁 문제가 정치현안으로 대두되었다. 2003년 7월 1일 홍콩 기본법⁴⁾ 제23조와 관련하여 ‘보안법 파동’이 일어나 50만 대중시위가 발생했다. 홍콩기본법 제23조는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 중앙에 대한 반역, 분리, 선동 및 반란, 또는 국가 누설금지와 외국 정치단체의 홍콩내 활동 금지, 홍콩내 정치단체의 외국단체와의 연계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2004년 초부터 행정수반 및 입법회 선거의 직선제 실시 등에 관한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중국 중앙정부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홍콩내 민주제파 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04년 4월 6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의한 ‘홍콩 기본법 해석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는 2007년과 2008년도 행정수반과 입법회 의원 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2005년 3월 12일 통치화(Tung Chee Hwa, 董建華) 행정수반이 건강상 이유로 사임하자, 뒤를 이은 도널드 창(Donald Tsang, 曾蔭權) 행정수반은 2005년 12월 ‘부분적인 정치 개혁안’ 제시했다. 그러나 범민주계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고 범민주계는 직선제 도입 시기를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도널드 창 행정수반이 제시한 ‘부분적인 정치 개혁안’ 내용은 행정수반 선거는 간접선거 방식을 유지하는 한편, 선거인단 규모를 확대하고, 입법회 선거는 의원수를 6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었다. 2007년 3월 제3대 행정수반 선거를 앞두고 정치제도 개혁 문제가 다시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자, 도널드 창 행정수반은 제3대 홍콩정부 출범 직후 직선제 실시에 관한 정부안(green paper)을 발표하겠다는 공약 제시했다.(李風, 2014) 같은 해 7월 1일 도널드 창 의 제3대 행정수반 취임 후, 11월에 직선제 실시에 관한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여론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발표됐다. 정부가 실시한 여론 조사는 직선제 실시 시기와 실시 범위, 추천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중국 중앙정부는 2017년 행정장관 선거부터 직선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지만 내용을 보면 친중국적 성향을 가진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자에 대한 직접선거라는

4) 홍콩 특별자치구의 헌법과 같은 법을 말함.

점에서 홍콩 주민들의 원하는 후보를 낼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적 선거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홍콩 민주화 시위의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⁵⁾

2. 경제적 측면

상술한 바와 같이 홍콩 민주화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치적인 측면이 농후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홍콩반환이후 중국 중앙정부의 통치하에 경제적인 발전과 개인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면 약간의 정치적 불만을 감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반환이후와 현재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명목상의 경제 지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인 체감 경제지수는 중국 중앙정부가 하나의 타도 대상이 될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점이 홍콩 민주화 시위의 내면적 발발 이유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인 수치에 나타난 지표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중국반환직후와 현재의 경제 지표

연도 \ 항목	국민총생산액	1인당 GDP	인구	본토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997년	1597억 달러	2만7330 달러	648만	15.6%
2013년	2740억 달러	3만8125 달러	718만	2.9%

자료원: 조선일보 2014년 10월 8일.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반환 직후와 현재를 비교하여 보면 명목상으로는 약간의 발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비교하면 미미한 상승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세계 금융대란과 세계물가를 고려한다면 홍콩지역의 경제 수치 증가는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긴장은 홍콩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상황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그 동안 내재되어 있는 불만이 정치적 시위와 함께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본토에서 홍콩으로 이주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위 계층들과 홍콩주민들간의

5) 홍콩의 정치제도 개혁은 ‘2017년 행정수반, 2020년 입법회 직선제 도입’이든지 간에 기본법상 3단계 승 인절차가 필요하다. ① 홍콩 입법회 내 2/3의 지지, ② 행정수반의 동의, ③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승 인이다. 이 내용을 보면 현 상황에서는 중국 중앙정부의 동의 없이는 직선제로 갈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홍콩지역의 지니계수를 보면 1997년 0.518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0.537로 상승되었다는 점은 소득과 분배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있다. 중국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 정치적인 불만 이외에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한 폭동은 화약고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조선일보, 2014/4/8)

III. 홍콩특구와 일국양제

본 장에서는 홍콩 민주화 시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국양제의 함축된 의미는 무엇이며 내재되어 있는 모순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일국양제의 함의

일국양제의 의미를 보면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제도를 같이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합이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홍콩지역의 주권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영국에 제시한 하나의 통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을 제시한 이유는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중국 지역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확장되어 있는 홍콩을 중국에 넘겨주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사안인 동시에 홍콩주민의 삶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곤혹스러운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덩샤오핑은 홍콩지역의 제도와 생활양식을 그대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주권만 중국에 반환하는 제안으로 일국양제를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홍콩지역은 중국 중앙정부에 직속되는 특별행정구(이하 특구)가 되며, 국방과 외교권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할 수 있다. 둘째, 특구는 독자적인 행정, 입법, 사법권을 부여하며 현존의 사법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셋째, 특구의 대표는 현지 주민들에 의해 구성한다. 다시 말해서 선거 및 협의를 거쳐 선출하고 중국 중앙이 임명한다. 넷째, 현행의 경제제도 및 생활방식은 존속한다. 다섯째, 현지 화폐는 그대로 통용한다. 여섯째, 중국 중앙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일곱째, “홍콩 차이나”라는 이름하에 국제조직과의 관계를 갖는다. 마지막

으로 일국양제라는 제도는 50년간 불변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국양제의 함의를 보면 영국으로서는 안심하고 홍콩을 중국에 반환해도 된다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보았다. 특히 마지막의 동 제도의 50년 불변 원칙을 순수하게 수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홍콩 지역의 주권반환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가는 과정에서 홍콩의 자본과 기술은 절실히 필요한 요소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실지를 되찾아왔다는 명분을 선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정권의 공고화를 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중국의 입장에서는 홍콩지역의 자본주의를 중국과 바로 통합한다는 것은 홍콩의 반발도 있지만, 중국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바로 통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고 50년간 시간을 두고 통합쪽으로 유도한 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50년 후에도 통합과 통일이 불가능할 경우 다시 50년을 연장하면 된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동제도의 50년 불변이라는 규정은 영국이 안심하고 홍콩을 반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중국을 신뢰하도록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顏觀潮, 2014/10/6)

중국 중앙이 영국과 서방세계에 제시한 일국양제의 이론적 배경과 근거는 신뢰할 수 있는 여건과 경험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의 모델은 이미 세계적으로 성공한 모델이고 그 배경은 평화공존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서 현세계는 상이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공존을 해 오고 있으며, 평화공존이 추구하는 전쟁방지와 평화의 지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一世界兩制의 세계’⁶⁾ 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하나의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면 강한 이념이 약한 이념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으나 두 개의 이념이 병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이 타방을 소멸시키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됨으로서 인류가 추구하고자 하는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동 이론적 배경으로 따라 중국도 홍콩을 반환 받은 후 양제도의 공존을 통해 두 지역 모두의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경험상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6) 하나의 세계에 두 개의 제도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을 통하여 인류가 선을 추구 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질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세계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일국양제의 문제점

일국양제는 중국의 근대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역사에 대한 보복과 반발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영국은 망각하였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홍콩지역이 영국령으로 지배하여 왔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중국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근대 역사 중에서 아편전쟁이 시작된 1840년부터 신중국 건립으로 새로 태어날 때까지의 109년을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인식하고 있다. 이때는 중국의 가장 혼란기 일뿐만 아니라 힘이 없어 열강에 영토를 빼앗기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기력이 없어 가난과 죽음으로 치닫게 한 역사이기 때문이다.

홍콩지역을 영국이 지배한 역사적 배경을 보면 1840년 아편전쟁의 결과로 1842년 난징조약으로 홍콩섬(HongKong Island)을 영구 할양하게 되었고, 1856~1860년 2차 아편전쟁으로 영국이 승리한 후 맺어진 1차 베이징 조약에서 주룽(九龍)반도의 일부분과 스톤카터(Stone Cutter)를 영구 할양 받았다. 그 후 1898년 청일전쟁과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2차 베이징조약을 통하여 신계(新界, New Territories) 및 235개 부속도서를 99년간 조차한다는 조약을 맺었다. 2차 베이징 조약에 의해 중국은 1997년 홍콩을 반환 받으려 영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중영간의 마찰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영국이 점유하고 있는 모든 지역을 중국에 반환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영국으로서는 1896년의 조약에 의거한 반환은 신계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동 지역만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중국에 전하였다. 중국은 과거의 역사를 다시 제자리에 되돌려 잃었던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의지에서 만약 영국이 홍콩의 모든 지역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영국이 과거 무력으로 강제 점령한 방식대로 중국도 무력으로 동 지역을 점령하겠다는 무력사용 의지를 밝힘으로서 중영간 험악한 분위기까지 갔다고 할 수 있다.

영국으로서는 중국의 전쟁 불사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포클랜드 전쟁과 같은 전쟁을 치러야 하지만 중국과 전쟁은 영국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었다. 전쟁을 치르기에는 영국 본토와 너무 떨어져있다는 점이며 중국과 전쟁은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는 고려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양제는 홍콩주민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수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덩샤오핑이 주장하는 20자 방침⁷⁾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조선일보, 2014/10/8) 이러한 내용을 영국이

7) 덩샤오핑이 일국양제와 관련하여 주장한 20자 방침은 “回收主權，設立特區，制度不變，港人治港，保持繁榮”으로 그 의미는 주권을 회수하고 특구를 설치하고, 제도는 변하지 않으며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를 보장하며, 번영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락하였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의도대로 홍콩의 반환이 이루어지면서 영국의 주장은 퇴색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으로서는 영국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명분만을 세워주고 함축된 정치 경제적 이득은 중국이 모두 챙기는 중영간의 합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人民网, 2014/9/1)

다음으로는 일국양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출발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일국양제에 의한 홍콩의 반환이라는 자체가 홍콩과 중국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국은 어떤 국가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반환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점은 다시 고려하여 볼 만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홍콩을 흡수하는 것인가 혹은 홍콩의 자본주의가 중국을 흡수 통합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는 당연히 중국에 의한 홍콩 통합이라는 점에서 하루아침에 홍콩의 주권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즉 홍콩의 주권이 상실되는 일국양제를 홍콩주민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처리하여야 할 문제였다는 점은 17년이 지난 현재에 시사하는 바가 클 뿐만 아니라 작금의 홍콩 민주화 시위를 대변해 주는 관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 고려하였어야 할 관건은 양제의 문제로 중국과 홍콩은 통합 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중 어느 것이 주체인가에 대한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여야 할 문제였다는 것이다. 두 제도의 병존이라는 것은 정치적 술사에 불과한 것이고, 분명한 사실은 사회주의가 주체이고 자본주의는 비주체로 전락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국양제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國際經濟, 2014/9/30)

마지막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양제가 당시 중국의 여건에 합리적인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어야 될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헌법과 배치되는 초법적인 내용이 일국양제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제시한 일국양제는 법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위법이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화인민공화국 총칭강령과 서문에는 사회주의만이 살길이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파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이를 무시하여 적용하였다는 점은 일국양제를 추진하는데 많은 적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또 하나 특구 설치에 대한 문제로 특구는 당시 헌법 제31조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인민대표회의의 법률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특구를 설치하는 자체는 합법적이나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언제든지 전인대에서 변경 및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구의 세부적인 운영과 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지적하였어야 할 문제이다.(毛鑄倫, 2014)

이에 대해 골수 공산주의자들과 당원들은 사회주의 이외의 이념을 수용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당시의 최고 지도자인 덩샤오핑은 실사구시라는 정책으로 이를 밀고 나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중국의 상황은 이념적인 투쟁을 할 여력이 없고 현재를 직시하고 무엇이 중국에 이익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할 상황인 만큼 자본주의가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를 과감하게 수용하여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를 일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環球時報-環球網, 2014/9/28)

IV. 일국양제에 대한 영국과 중국의 반응

1. 영국의 반응

일국양제에 의한 홍콩 반환을 수락한 당사자는 분명 영국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7년이 지난 현재 일국양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는가? 다른 방안을 고민하였는가? 홍콩주민의 미래를 걱정하고 추진한 반환인가? 일국양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등과 같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환이후부터 현재까지 홍콩 주민의 민주적 행동은 계속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는 반응을 하지 않고 개선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할 수 있다.(新華網, 2014/10/16)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해 영국은 법적으로는 하자와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지도국의 입장에서는 도덕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처와 방안 및 해결책을 강구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영국의 행동과 발언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중국으로서는 홍콩 민주화 시위가 단순한 시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국가들이 중국을 간섭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齊鵬飛, 2014/9/5)

여기에서 일국양제에 대한 영국의 입장을 두 가지로 축약하여 설명하면, 하나는 일국

양제의 모순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반환조치를 수락하였다면, 영국에 의한 홍콩 포기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영국이 이러한 문제를 전혀 모르고 일국양제의 장점만을 믿고 중국에 반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이다. 전자는 국제적인 조약에 의거한 홍콩반환을 영국의 국가이익만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것으로 홍콩주민이 사회주의 제도권 안에 편입되는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반환되기 이전까지는 홍콩주민은 분명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보장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단적인 예로 영국은 1981년 3월 영국 의회에서 홍콩 주민의 영국이주를 금지하기 위한 국적법을 개정한 것은 홍콩 주민과 영국 국민과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분명 홍콩의 포기 또는 방치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약에 의한 홍콩 반환후의 문제는 중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회피성 조치였다고 분석하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도 전자의 시각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국은 홍콩 반환으로 인한 홍콩 주민의 영국 이주는 사회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 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홍콩 주민의 이주금지과 함께 서둘러 중국과 반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시각이 당시의 영국의 입장이었다면 영국은 현재의 홍콩 민주화 시위를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시각으로 태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영국은 중국과 다각적인 접촉과 협의를 통해 일국양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홍콩의 미래를 설계하여야 함을 중국에 호소하는 자세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시각을 보면 일국양제의 표면적인 장점만을 그대로 수용하고 중국을 믿고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다는 시각이다. 과연 영국이 일국양제의 내면적 함의와 중국의 속셈을 계산하지 못할 정도로 외교적으로 단순한 국가인가에 대한 반론이다. 만약이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국은 외교 역사에서 엄청난 실수와 실책을 범한 것으로 홍콩 주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홍콩 민주화 시위는 남의 일이 아닌 영국 자신의 일이라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 선진국으로서의 도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국과 중국간 맺어진 일국양제에 의한 홍콩 반환에 대한 극단적인 시각 모두 영국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분석의 결론이다. 영국은 홍콩 반환의 협상 당사자로서 당시의 협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어 가는지 여부에 대한 체크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에서 중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것이 현재의 영국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조약에 대한 의무는 양 당사자가 조약 내용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을 때만이 조약 이행되어 진다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라고 할 수 있다.(陳建仲, 2014)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조약폐기권을 발효시켜 영국과의 조약을 폐기한다면 영국과 협상할 의무도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이를 강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만약 영국과의 조약을 폐기할 경우 일국양제에 의해 대만의 주권 반환을 추진하고 시점에서 중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이와 같은 극단적인 처방은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영국은 중국의 진퇴양안의 입장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중국과 홍콩문제를 논의한다면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과정에서 서방 선진국가들의 지지와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英國金融時報, 2014/10/2)

2. 중국의 반응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적절한 수준에서 마무리되길 희망하고 있으나, 홍콩주민들은 중국 중앙정부의 무응답에 더욱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태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홍콩 민주화 시위가 단순히 홍콩문제를 해결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카오, 대만, 소수민족 등에 파급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다. 단순히 홍콩의 의사를 수용하였을 경우 바로 옆에 위치한 마카오도 같은 수준의 처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고, 나아가서는 일국양제에 의한 대만의 실지 회복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經濟學人, 2014/10/31)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중국은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조치는 일국양제를 지키려는 수준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일국양제의 50년 불변 원칙을 그대로 준용한다면 홍콩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용한다면 일국양제의 기본적인 원칙이 훼손됨으로 인하여 중국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뿐만 아니라 시위를 하면 중국이 물러난다는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는 끝이 보이지 않는 중국과 홍콩간의 줄다리기 게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趙國材, 2014)

중국이 최근 개최한 4중 전회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진핑은 依法治國(법에 따른 통치)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보면 홍콩 문제도 법에 의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할 수 있다.(영남일보, 2014/10/30) 따라서 홍콩 민주화 시위는 법리적인 판단으로 보면 위법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나, 홍콩지역은 중국의 본토

와 달리 언론과 서방에 개방되어 있는 지역으로 중국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경우 거기에 따르는 모든 상황을 책임져야 할 것이 분명하기에 아직 조치를 유보하면서 관망하고 있다고 보인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홍콩 시위대가 베이징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보도는 홍콩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어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강경진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G2 국가를 직접적으로 자부하고⁸⁾ 있는 시진핑 행정부가 무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는 모습을 서방에 보여주는 것이 결코 중국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에 설부른 판단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中國新聞網, 2014/9/1)

또 하나 중국의 입장은 최소한 일국양제에 의한 홍콩과 마카오의 주권 회수의 결과가 긍정적인 결론이 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입장이다. 즉 일국양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대만의 실지를 회복할 때까지는 손해를 감수하는 차원에서 일국양제를 실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일국양제의 실패로 인하여 대만이 독립하거나 영원히 분단된 상태로 고착화 되어 간다면 중국의 통일정책은 실패로 돌아 갈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의 독립으로 연계되어 질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의 판단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면 중국은 소수민족의 독립으로 전국토의 2/3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중국이 영원한 약소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염려는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미간의 경쟁관계에서 중국은 패배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정책이며, 향후에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여 갈 것으로 보인다.(中國新聞網, 2014/9/2)

V. 대만의 반응과 시사점

대만에게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하나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리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일국양제가 홍콩에서 실패한다면 대만으로서 는 그 동안 중국이 취해온 일국양제를 거부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힘들이지 않고 양안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의도하는 대로 진행되어지지 않고 중국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되어 질

8) 그 동안 중국이 G2 국가로 분류되는 자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중국의 새로운 모습이며, 그 이면에는 미국과의 경쟁관계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우 대만은 계속해서 일국양제에 의한 양안통일이 중국의 대대만 정책으로 고착화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도 중국의 공세를 피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天涯論壇, 2014/10/3)

양안간의 일국양제는 양제에는 별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차별성이 점차 없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일국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양안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은 하나라는 원칙에는 양안은 동의하고 있으나, 그 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인가 아니면 중화민국인가에 대한 논쟁은 아직 진행형에 있다는 점에서 일국양제에 의한 양안의 통일은 당분간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양제는 경제적인 시각을 함축한 개념으로 경제적인 처리는 양안간의 ECFA의 체결로 경제적인 협력과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⁹⁾ 그러나 일국에 대한 문제는 정치적인 시각이 농후한 주제로 양보 할 수 없는 변수라는 점은 확실하다. 일국에 대한 논의는 1992년 九二共識¹⁰⁾으로 어느 정도의 합의를 보았으나, 양안이 동의하는 수준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중단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대만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양안은 홍콩과는 달리 정치적인 합의를 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합의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을 먼저 행동으로 옮기자는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정치적인 측면을 배제한 경제적인 공동 관심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통합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정치적인 통합으로 이어 갈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문이나 동의서를 교환 한 것은 아니다.(花俊雄, 2014)

현 단계에서 대만이 중국의 일국양제를 수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나 나름의 딜레마도 있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만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정자들의 입지가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대만 총통이 대만省 주석으로 추락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현 단계에서 대만이 일국양제를 수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李本京, 2014) 또한 홍콩의

9) 양안간 경제협정은 중국의 양보와 배려로 이루어진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중국의 정치적 술수에 대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양안간 경제협력력이 발전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나, 정치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0) 1992년 양안통일을 위한 공통인식이라는 의미로 처음으로 통일문제 논의하였다. 대만에서는 海峽交流基金會, 중국에서는 海峽兩岸關係協會가 대표로 나와 민간차원에서 양안간의 통일 논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양안 모두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은 동의 하나 일국에 대해서는 쌍방은 각기 다른 해석으로 하자는 ‘一中原則 各自表述’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누구도 주가 될 수 없고, 양안 모두는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사례를 보면 사회주의가 주체가 되는 통합을 대만 주민들이 원치 않고 있다는 것으로 이를 주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일국양제에 의한 양안 통합은 요원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만이 현재 진행중인 여러 가지의 태도는 이미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올림픽에 대만이 Chinese Taipei라는 국호로 출전한다는 자체가 중국의 지방정부라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도 대만과 FTA라고 할 수 있는 ECFA를 체결하였다는 것은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가장 반대하고 있는 대만독립이 이미 달성되어 있다는 전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중국에게는 고민이 될 수 있다.(环球网, 2014/10/21)

VI. 결 론

홍콩 민주화 시위는 발발한지 두 달이 넘어서고 있지만 해결의 국면이 보이기는 커녕 점점 강도가 심해질 뿐만 아니라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중앙정부를 당혹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는 단순한 중국과 홍콩 주민들간의 문제를 벗어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파벌과 친중국 파벌간의 경쟁 구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정부가 홍콩 민주화 시위에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인하여 홍콩 시위는 중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발전하여 국제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홍콩문제는 중국 국내문제로 외부세력의 간섭이나 개입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표시를 하고 있으나, 단순한 국내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반중국간의 국제적 문제로 비화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이내영, 2014/10/5)

이외에도 홍콩 민주화 시위로 인한 관광객의 감소와 시위대의 도시 점거로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일로에 있어 홍콩 내부에서도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 내부적 갈등요인으로 비화되어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홍콩 민주화 시위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화 쟁취라는 명분이 있으나,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측면이 있기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하여야 할 것은 친 중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권력층과 서민간의 갈등이 이

번 시위를 계기로 더욱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은 홍콩의 미래가 희망적이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보아야 할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홍콩문제의 발단은 일국양제의 원칙준수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홍콩주민들의 생각은 일국양제가 아니라 ‘일국양심(一國兩心)’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홍콩인은 중국인과는 다른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조선일보, 2014/10/14) 홍콩문제의 발단은 정치적인 문제가 주원인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원인은 중국과 홍콩의 정체성에 따른 갈등이 17년 동안 내재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 과오의 결말이 홍콩 민주화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홍콩주민들은 처음부터 자신은 중국인이 아니라 홍콩인이라는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국양제에 의해 홍콩이 반환된 이후에는 홍콩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하게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중국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¹⁾ 홍콩은 그 동안 누려온 기본권이 중국 중앙정부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 중앙과 결탁한 일부의 재벌과 권력층에 의해 부와 권력이 편중되어 지는 불평등 사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해결의 키는 중국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중앙정부도 이에 대한 해결에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의 부재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의 민주화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홍콩의 의사를 수용한다는 것은 일국양제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대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홍콩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본토내의 시위는 보도 관제를 하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홍콩 민주화 시위는 이미 국제문제로 확산되어 있어 무력을 사용할 경우 중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란 점이다.(이테일리, 2014/10/15) 따라서 중국이 홍콩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따라 일국양제는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 홍콩인들은 홍콩인이라는 정체성의 표현으로 언어를 내세우고 있다. 북경에서 사용하는 보통화(mandarin) 보다는 광둥어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조문헌

- 姜新立, 2014, “警惕香港反政改佔中環背後的外部勢力”, 『海峽評論』 286期, 海峽評論雜誌社.
- 高旭晨, <http://theory.people.com.cn/n/2014/0928/c148980-25753147.html>, “推進香港民主化的首要之處是放下過度抗爭的心態”, 中國共產黨新聞網(검색일: 2014년 9월 28일).
- 李 風, 2014, “香港政治風暴: 2017普選與「佔領中環」對決”, 『海峽評論』 286期, 海峽評論雜誌社.
- 李本京, 2014, “客觀乎, 扭曲乎!”, 『海峽評論』 287期, 海峽評論雜誌社.
- 毛鑄倫, 2014, “「佔中」是美國企圖一分享香港治權”, 『海峽評論』 287期, 海峽評論雜誌社.
- 新華網, http://news.china.com.cn/live/2014-10/16/content_29297422.htm, “境外媒体眼中的香港占中”(검색일: 2014년 10월 16일),
- 영남일보, “집권 3년차 시진핑 ‘범치중국 건설’ 본격시동”, 2014년 10월 30일.
- 英國金融時報, <http://www.ftchinese.com/story/001058463/?print=y>, “英國就香港示威活動發表聲明”(검색일: 2014년 10월 2일),
- 熊 玠, 2014, “要普選還是要奪權?—香港政爭的反對派究竟何求”, 『海峽評論』 286期, 海峽評論雜誌社.
- 이내영, 2014, “홍콩 민주화 시위의 과장과 중국의 딜레마”, 일민국제연구원, <http://news.donga.com/3/all/20141017/67222205/1>(검색일: 2014년 10월 5일)
- 이데일리, 홍콩 시위에 침묵하는 한국, 2014년 10월 15일.
- 人民网, <http://hm.people.com.cn/n/2014/0220/c230533-24410637.html>, “香港激辯如何對待內地客 學者建議加強國民教育”(검색일: 2014년 9월 1일)
- 張麟徵, 2014, “公民提名、普選、民主反思—談香港的困境與出路”, 『海峽評論』 286期, 海峽評論雜誌社.
- 趙國材, 2014, “「抗爭」的臉孔, 最終的 收益者是誰?—論「顏色革命」與香港「佔中」”, 『海峽評論』 287期, 海峽評論雜誌社.
- 조선일보, “中, 마오의 ‘16자 전법’ 구사...홍콩시위 11일만에 잠재워”, 2014년 10월 8일.
- 조선일보, “홍콩시위 근본원인이 ‘一國兩制’가 아니라 ‘一國兩心’이라는데...” 2014년 10월 14일.
- 中國新聞網, <http://news.sina.com.cn/c/2014-09-01/192430778135.shtml>, “香港20多名示威者強闖政制發展簡介會”(검색일: 2014년 9월 1일)
- 中國新聞網, <http://www.chinanews.com/ga/2014/09-01/6551570.shtml>, “香港警方譴責沖擊政制發展簡介會的行爲”(검색일: 2014년 9월 2일)
- 陳建仲, 2014, “解讀香港「佔中」行動隱藏的政治訊息”, 『海峽評論』 287期, 海峽評論雜誌社.
- 天涯論壇, <http://bbs.tianya.cn/post-90-578314-1.shtml>, “倫敦旅遊 英國環遊班車”(검색일: 2014년 10월 3일)
- 國際經濟, <http://www.howbuy.com/news/2014-09-30/2615488.html>, “綜述: 香港示威者仍在街頭逗留繼續向中國政府施壓”(검색일: 2014년 9월 30일)
- 花俊雄, 2014, “駁政改《決定》是「假普選」之說”, 『海峽評論』 286期, 海峽評論雜誌社.
- 環球時報-环球网, <http://money.163.com/14/0928/11/A77O73QJ00254U80.html>, “香港反對派沖擊政府總部 60餘名示威者遭逮捕”(검색일: 2014년 9월 28일)
- 环球网, http://www.js.xinhuanet.com/2013-10/21/c_117793495.htm014, “香港反對派勾結「台獨」鼓吹「去中國化」遭抗議”(검색일: 2014년 10월 21일)
- 經濟學人, <http://bbs.tianya.cn/post-worldlook-1300970-1.shtml>, “一般台灣人未受香港示威影響”(검색일: 2014년 10월 21일)

일: 2014년 10월 31일)

顏觀潮, <http://gb.cri.cn/42071/2014/10/06/6891s4716319.htm>, “1300名香港市民示威抗議 不滿蘋果日報煽動學生參與占中”(검색일: 2014년 10월 6일)

齊鵬飛, http://www.china.com.cn/fangtan/2014-09/02/content_33409397.htm, “香港政改推進民主進程”(검색일: 2014년 9월 5일)